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 연구

A Study on A Model Sample for Guidance System for Copyright of Domestic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김 규 환(Gyuhwan Kim)*

< 목 차 >

I. 서론	1. 조사대상
II.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 액세스 현황	2. 조사내용과 분석결과
1.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현황	3. 소결
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현황	IV.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
3. 소결	1. 목적과 목표
III. 해외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사례 조사	2. 운영 프로세스(안)

초 록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액세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경우 33.8% 정도만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주체로는 학회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학술지 중 34% 정도가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Toll access 학술지였으며 56% 정도가 무료접근이 가능한 학술지(Open Access 학술지, Hybrid Access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 시스템 사례로써 영국의 SHERPA/RoMEO와 일본의 SCPJ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정보를 주로 수집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 정책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4가지 운영단계별 기본방향성과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학술지 출판, 저작권 정책, 오픈액세스, 셀프 아카이빙, 구독 학술지, 무료 접근 학술지, 자유 접근 학술지

ABSTRACT

The study aimed to suggest a model sample for guidance system for copyright of domestic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Toward this end,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copyright of domestic journals and open access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ses, it turned out that 33.8% of domestic journals had 'regulations on ownership of rights to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and that the subject to ownership of rights to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accounted for 28.8%, which was the highest rate. Of domestic journals, 34% charged a subscription fee, and they were toll access journals, and 56% were free access journals. As for system examples of guide system for copyright of foreign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and investigate SHERPA/RoMEO in the U.K. and SCPJ in Japan and generate considerations at a time of domestic application. What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overseas examples are focused on collecting and introducing self-archiving policy by authors for academic journals, so there are limitations in offering information including open access publication policy for domestic journal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 the study designated the purpose, direction and four step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t a time of development of guide system models for copyright and open access policy for domestic journals before suggestion of the basic direction and operational methods by stage.

Keywords: Journal publishing, Copyright policy, Open access, Self-archiving, SHERP/RoMEO, SCPJ, Toll access journal, Gratis journal, Libre journal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yuhwan@jj.ac.kr)

**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9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0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65-288,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265]

I. 서론

해외의 경우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유통이 상업 출판사가 운영하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업 출판사가 해당 학술지 논문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자가 되어 디지털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유통 체계를 보면 학술지 논문의 발행기관과 학술지 논문의 유통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이다. 즉 학술지 자체의 발행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가 담당하고 학술지 논문의 유통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같은 무료유통기관과 누리미디어와 한국학술정보(주)와 같은 유료유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학술지 논문의 원저작권자인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간에 명확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지 출판사가 무료유통기관이나 유료유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이들을 통해서 학술지 논문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홍재현 2008).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 운동이 국내에도 수용되면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간의 저작권 귀속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2가지 추진전략(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간에 저작권 양도 계약시 저작권 귀속규정에 기관 리포지터리 등에 저자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되며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 유통을 위해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중 어떤 라이선스가 채택되고 있다는 내용이 저작권 귀속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규정과 오픈엑세스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에 의해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유통, 그리고 오픈엑세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정책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외 학술지 출판사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저작권과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를 SHERPA/RoMEO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일본의 학회들도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학회지의 저작권과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SHERPA/RoMEO와 SCPJ에 등록된 학술지

출판사들은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정책정보를 안내하는 목적만으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HERPA/RoMEO에 등록된 일부 학술지 출판사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학술지는 오픈엑세스 정책이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SCPJ에 등록된 학회들의 경우에도 오픈엑세스 정책이 없다거나 현재는 없지만 향후 고려 중에 있다는 등의 정책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즉, SHERPA/RoMEO와 SCPJ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오픈엑세스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정책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규정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윤희윤과 이재민(2006)이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이어서 홍재현(2008)이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를 통해 오픈엑세스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귀속 규정의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학술지 편집위원이 스스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현재 발행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규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오픈엑세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필요하다면 저작권 귀속규정과 오픈엑세스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식채널을 통해 해당 정책정보들이 학술지 출판과 유통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출판사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저작권과 오픈엑세스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술지 출판과 유통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를 분명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이하 안내시스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간의 저작권 귀속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명확한 규정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을 출판 및 유통시키고 학술지 논문의 새로운 유통 방식인 오픈엑세스 운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와 이용자들에게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재현(2008)과 정경희(2011)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 및 오픈엑세스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안내시스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고려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SHERPA/RoMEO와 SCPJ의 운영사례조사를 토대로 국내 학술지 출판사로부터 수집할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들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4가지 운영단계별 기본 방향성과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Ⅱ.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엑세스 현황

1.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현황

홍재현(2008)은 2007년 7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홍재현 연구결과 중에서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규정유무와 규정명칭,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주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명칭과 유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단서 유무와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안내시스템 모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가.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유무와 규정 명칭

전체 조사대상 학술지 906종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종(66.2%)의 학술지에서 학술지 논문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권리귀속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명칭은 편집규정, 편집·출판규정, 논문투고규정,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 편집방침, 논문투고요강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스템 모형에서는 국내 학술지 출판사들의 상당수가 학술지 논문에 대한 명확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다는 사실과 권리 규정을 수집할 경우 권리규정 명칭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학술지 논문의 권리 귀속 주체

전체 906종 가운데 261종(28.8%)은 학술지 논문의 권리주체가 ‘학회’이며 ‘연구소’는 12종(1.3%), ‘저자’는 6종(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우에는 학회와 저자가 저작권을 갖되, 저작권의 지분권의 하나인 전송권이 학회에 귀속되도록 하는 등의 경우(11종, 1.2%)가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유무에서 권리귀속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600종(66.2%)의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인 저자가 해당 학술지 논문의 권리주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권리주체가 저자인 경우는 606종으로 전체의 66.9%¹⁾라고 할 수 있다. 국내

1) 학술지 논문의 권리 주체가 ‘저자’ 라고 밝히고 있는 6종(0.7%)과 권리귀속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

와 같이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유통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에서 유통기관을 통해 학술지 원문이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학술지 출판사, 즉 학회와 연구소가 학술지 논문의 권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술지 출판사인 학회와 연구소가 학술지 논문의 권리주체인 경우(전체 학술지의 30.1%)보다 실질적으로 저자가 권리주체인 경우(전체 학술지의 66.9%)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시스템 모형에서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원저작권자인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간에 명확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지 출판사가 무료와 유료 유통기관들과 이용계약을 맺고 학술지 논문을 인터넷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 명칭과 유무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문 명칭으로는 원고(논문) 게재 동의서, 저작권 양도 합의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지적소유권 위임서 등이 사용되고 있고 영문 명칭으로는 Copyright Release and Author Agreement, Copyright Transfer, Copyright Transfer and Statement of Originality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이 있는 306종의 학술지 중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학술지는 77종(25.2%)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스템 모형에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수집할 경우 관련 명칭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단서 유무와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

일반적으로 저작권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는 논문투고규정 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명기되어 있다. 학술지 논문의 권리귀속 규정이 있는 306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의 명시 유무를 보면 165종(54.2%)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홍재현은 학술지 출판사의 편집위원들이 학술지 논문의 권리처리를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음과 저작권의 내용에 대한 낮은 이해 및 관련 단서 조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 조항이 기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자가 저작권을 학술지 출판사에 양도한 후라도 지금과 같은 오픈엑세스 환경에서는 저자로서 가지는 권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회가 학술지 논문의 귀속주체이면서 저작권 귀속의 내용과 단서가 있는 129종의 학술지 중에서 저자에게 저작권 양도 후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학술지는 35종(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서 분명하게 이를

지 않은 600종(66.2%)을 합치면 606종임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규정하고 있는 학술지는 20종(15.5%)에 불과하였다. 그래도 오픈액세스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한 긍정적인 내용과 단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학술지 출판 후 편집저작물, 다른 출판물 및 개인적인 웹사이트나 고용기관의 웹 사이트와 같은 저자들의 2차적 저작물에 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교육적 목적 및 저자 고용기관 내부에서의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논문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저작권 양도 후 저자(들)는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웹 사이트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를 가짐

이상을 토대로 안내시스템 모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귀속규정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작권 귀속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내용과 단서는 논문투고규정 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분산되어 기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회가 학술지 논문의 귀속주체인 학술지들의 경우 저작권 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학술지가 그리 많지 않으며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서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액세스와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된 내용을 찾고자 한다면 논문투고규정이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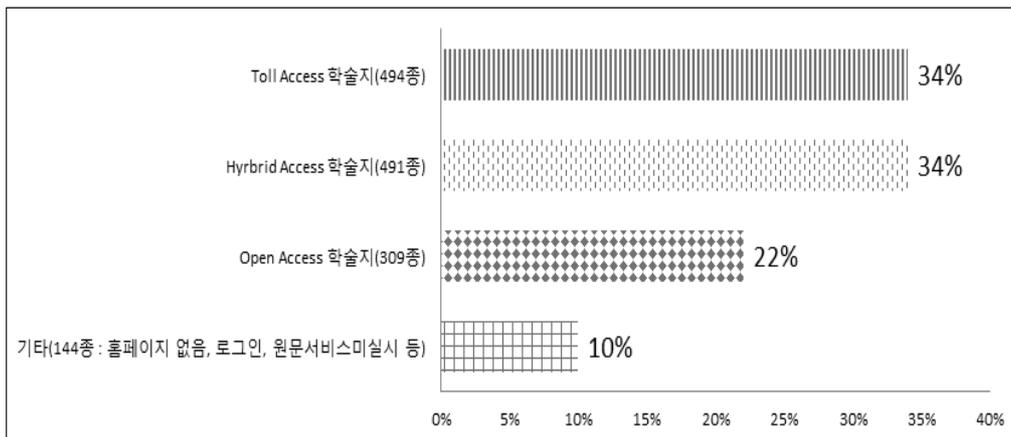
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현황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실천전략에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이 있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간에 저작권 양도 계약시 저작권 귀속 규정이나 저작권 양도 동의서상에 오픈 리포지터리 등에 저자 셀프 아카이빙을 허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학술지 중에서 저작권 귀속규정이나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된 내용과 단서를 명기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되며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유통을 위해서 CCL 중 어떤 라이선스가 채택되고 있다는 내용이 저작권 귀속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발간하는 JISTaP(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를 포함한 일부 학술지에서 저자가 저작권 귀속주체이며 학술지 논문에 어떤 CCL 유형이 부착되어 유통된다는 것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 현황은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

세스 출판적 측면이 아닌 학술지 논문의 이용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정경희(2011)은 국내 학술지 유형을 원문서비스 채널을 기준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유료DB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Toll Access(TA) 학술지, 학술지 발행기관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 원문이 공개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Open Access(OA) 학술지, 셋째, 상기 두 가지를 병행하는 Hybrid Access(HA) 학술지이다. 이 중에서 OA 학술지에는 CCL이 적용된 완전 OA 학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²⁾ 대부분은 논문의 저작권자가 합법적인 재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무료 이용이 가능한 학술지들이다. 여기서는 2011년 5월 9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438종을 대상으로 한 정경희 연구결과 중에서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 현황, 학술지 출판사별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의 비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안내시스템 모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가.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 현황

학술지 원문서비스 형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TA학술지, HA학술지, OA학술지로 구분된다. TA학술지는 전체 학술지 중에서 494종으로 34%를 차지하였고 HA학술지는 491종으로 34%를 차지하였다. OA학술지는 309종으로 2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144종의 기타 학술지는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가 있으면서도 원문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혹은 로그인을 해야만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국내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 현황

2) 2016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학술지 논문에 CCL이 부착된 완전 OA 학술지가 국내에는 218종이 있는 것으로 보임. KoreadMed Synapse(<http://synapse.koreamed.org>)를 통해 의약학 분야의 132종의 학술지가 CCL을 부착하여 학술지 논문을 유통하고 있으며 OAK Central(<http://central.oak.go.kr>)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86종의 학술지가 CCL을 부착하여 학술지 논문을 유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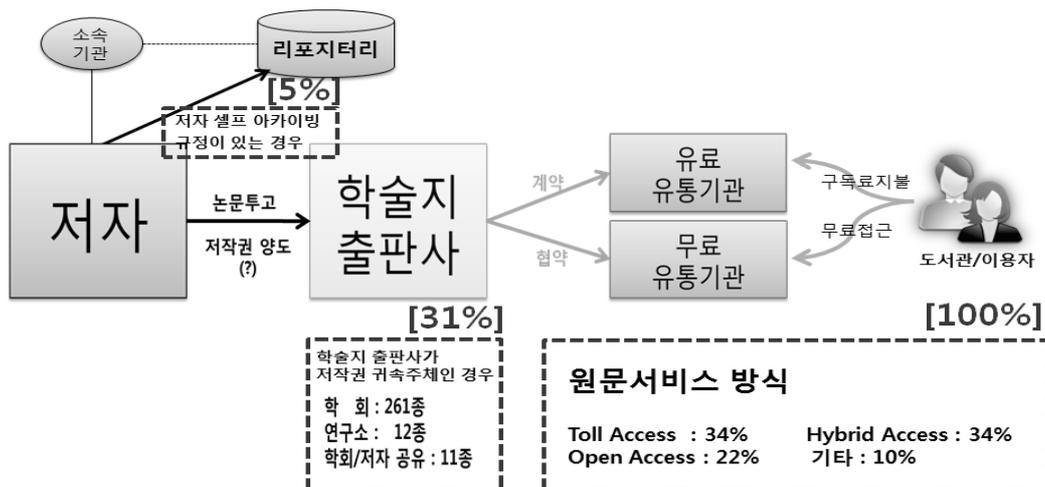
학문 분야별로 보면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TA학술지의 비율이 높고, 자연, 공학, 농수해양학 분야는 HA학술지 비율이 높으며, 의약학 분야는 OA학술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시스템 모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TA학술지와 OA학술지 외에 '유료DB와 학술지 출판사의 홈페이지나 무료DB에서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는' HA학술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OA학술지는 주로 의약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 학술지 출판사별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의 비율

학회의 경우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의 비율이 36%:3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의 비율이 22%:20%:42%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소의 경우 TA학술지:HA학술지:OA학술지의 비율이 25%:37%: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과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가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술지보다 오픈액세스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안내시스템 모형에서 고려할 사항은 학술지 출판사 중 오픈액세스 비율이 높은 곳은 대학과 연구소이며 이 중에서 연구소는 상당수가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이다.

3. 소결

지금까지 검토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액세스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 및 오픈액세스 현황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학술지 논문의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권리 귀속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학술지가 전체 학술지의 66.2%나 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술지 논문의 발행기관과 학술지 논문의 유통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구조에서는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리주체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인 경우(학회와 저자의 공유 포함)는 전체 학술지의 3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홍재현 연구가 2008년도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³⁾. 그러나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학술지 출판사들 중 상당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아닌 상태에서 유료와 무료유통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학술지 원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료DB로 유통되는 Toll Access 학술지와 Hybrid Access 학술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인 상황으로 볼 때, 안내시스템 모형에서는 학술지 출판사들이 저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거나 저자가 저작권 귀속주체일 경우에는 저자로부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분명하게 받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자가 기관 리포지터리에 학술지 논문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 학술지의 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오픈엑세스 운동이 수용되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고 있는 OAK(Open Access Korea)사업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리포지터리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규정이 전체의 5%정도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안내시스템 모형에서는 국내 학술지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저자 셀프 아카이빙 규정의 필요성과 관련 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국외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사례 조사

1. 조사대상

영국의 JISC가 지원하는 SHERPA/RoMEO와 일본의 NII가 지원하는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HERPA/RoMEO와 SCPJ의 운영주체와 참여기관, 그리고 주요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2015년 7월 31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1,890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술지 발행기관이 저작권 귀속주체인 비율은 64.1%(저자와 학술지 출판사가 공동 소유하는 3.1% 포함)로 나타났다

가. SHERPA/RoMEO

SHERPA/RoMEO는 영국의 노팅햄 대학의 SHERPA 서비스의 일부이다. SHERPA/RoMEO는 오픈 아카이브를 위한 영국의 JISC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이 이외에 Wellcome Trust와 RCUK도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연구자의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다루었다. SHERPA/RoMEO는 전 세계의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SHERPA/RoMEO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OAI(Open Archives Initiative)프로토콜 하에서 공개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
- ODRL(Open 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기존 표준을 사용하여 학술 ‘Open Access Research Papers’에 대한 권리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Simple Rights Metadata’ 요소 집합 개발
- OAI-PMH로 수집된 문헌의 메타데이터 집합 내에 권리요소를 통합시킬 방법 개발
- 권리요소를 저자에 의해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최종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를 나타내는 데모시스템과 지침 생성
-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고 충고해줄 ‘Rights Working Group’설립

SHERPA/RoMEO의 학술지 정보 제공 및 갱신은 크게 세 기관의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다. 영국도서관의 Zetoc 서비스(hosted by MIMAS)는 국제 연구출판물의 모니터링과 검색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 Lund University의 대학도서관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를 통해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NCBI(미국 국립 생물공학정보센터)의 Entrez 저널 리스트는 생물학 분야 학술지의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나. SCPJ

SCPJ는 일본의 오픈액세스 환경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 NII의 지원을 받아 3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회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는데 2006년 학회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접수된 학회들의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SCPJ를 구축하였다. SCPJ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오픈액세스와 관련한 국내 학회들의 정책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SCPJ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학회들 대상으로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한 컨설팅
- 궁극적으로 학술지 투고논문을 리포지터리 아카이빙 지원

SCPJ의 운영은 일본 츠크바 대학 부속 도서관이 수행하고 있고 NII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SCPJ의 참여기관으로는 치바 대학 부속 도서관, 고베 대학 부속 도서관, 도쿄 공업대학 부속 도서관이 있다.

2. 조사내용과 분석결과

조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 관련하여 학술지 출판사가 제출할 항목에 대해서 저작권 귀속주체/아카이빙 자료 버전/아카이빙 장소/아카이빙 조건/기타 메타데이터를 조사하였다. 둘째, 제출자확인/자료수집/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 방식을 조사하였다. 셋째, 검색/부가정보서비스 방식을 조사하였다. 앞서 제시된 3가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SHERPA/RoMEO와 일본의 SCPJ를 비교하였고 국내 적용여부를 제시하였다.

가.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 관련하여 제출할 항목

SHERPA/RoMEO와 SCPJ에서는 공통적으로 저작권 귀속주체, 아카이빙 자료 버전, 아카이빙 장소, 아카이빙 조건, 학술지 URL 등 메타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었다. 차이점은 SCPJ의 경우 저작권 귀속주체에 대해서 학회와 저자라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SHERPA/RoMEO는 저작권 귀속주체 표시를 권고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아카이빙 자료 버전과 관련하여 SHERPA/RoMEO가 4가지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SCPJ는 ‘검토중, 비공개, 무회답, 기타’ 를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일본 학회들 중 상당수가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국내 학회의 경우는 대부분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아카이빙 자료 버전과 관련하여서는 SCPJ의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셀프 아카이빙 정책과 관련하여 제출할 항목의 비교

구분	SHERPA/RoMEO	SCPJ	국내 적용 여부	
			SHERPA/RoMEO	SCPJ
저작권 귀속주체	· 저작권 귀속주체의 표시 권고	· 저작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구체적 항목 제시 - 학회에 귀속 또는 저자에 귀속	-	○
아카이빙 자료 버전	[4가지 선택항목] · Preprint만 아카이빙 · Postprint만 아카이빙 · Preprint과 Postprint 둘 다 아카이빙 · Publisher's version(PDF) 아카이빙	[5가지 선택항목] · Preprint만 아카이빙 · Postprint만 아카이빙 · Preprint과 Postprint 둘 다 아카이빙 · Publisher's version(PDF) 아카이빙 · 검토중, 비공개, 무회답, 기타	-	○
아카이빙 장소	[5가지 선택항목] · public eprint server	[4가지 선택항목] · non-profit electronic articl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profit server · author's or Employer's web site only · author or institutional server only · author's personal web site [그 외 아카이빙 장소에 대한 자유기술]	arc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bsite of institution subsidized by research funding · institutional repository · author's personal website [그 외 아카이빙 장소에 대한 자유기술]		
아카이빙 조건	[6가지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sher's copyright and source must be acknowledged · published source must be acknowledged · must link to publisher version · publisher's version/PDF cannot be used · publisher's version/PDF may be used · embargoes [그 외 아카이빙 조건에 대한 자유기술]	[6가지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play rights · display sources · display whether use is copyright-restricted · display links to the publisher version · comply with the grace period · apply in advance · report after the fact [그 외 아카이빙 조건에 대한 자유기술]	○	-
메타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명, 학술지 URL, 출판사 홈페이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명, 언어(일본어, 영어, 기타), 아카이빙 정책이 기술된 URL, 학회 홈페이지 등 	-	○

나. 제출자확인/자료수집/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 방식

SHERPA/RoMEO와 SCPJ에서는 제출자 확인방식과 자료수집방식, 그리고 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방식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자료수집방식에서 SHERPA/RoMEO가 학술지 출판사별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만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SCPJ는 학술지 출판사와 별도로 학술지마다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술지 출판사가 다수의 학술지들을 출판하며 학술지마다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차이점은 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방식에서 SHERPA/RoMEO와 달리 SCPJ에서는 학회들이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없거나, 고려 중이거나, 응답 등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Gray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표 2> 참조). 이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일본 학회들 중 상당수의 학회가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에도 SCPJ와 마찬가지로 'Gray 영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제출자확인/자료수집방식/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 방식 비교

구분	SHERPA/RoMEO	SCPJ	국내 적용 여부	
			SHERPA/RoMEO	SCPJ
제출자 확인방식	· 제출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 제출자의 이름과 직책, 이메일 주소	-	○
자료수집 방식	· 웹 폼 형식 -출판사(학회)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만 기술	· 웹 폼 형식 -학회와 학술지별로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을 계층적으로 분리하여 기술 가능	-	○
셀프 아카이빙 정책 표현방식	· RoMEO 컬러를 사용하여 아카이빙 정책을 표현함	· SCPJ 컬러를 사용하여 아카이빙 정책을 표현함. 이는 RoMEO 컬러에 Gray 컬러를 추가한 것임	-	○
	RoMEO colour	Archiving policy		
	green	Can archive pre-print and post-print		
	blue	Can archive post-print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yellow	Can archive pre-print (ie pre-refereeing)		
	white	Archiving not formally supported		
SCPJ Color	Archiving policy			
Green	Author can archive both Pre-prints & Post-prints			
Blue	Author can archive only Post-prints			
Yellow	Author can archive only Pre-prints			
White	Author can not archive			
Gray	Under consideration, No response, Not published, other			

다. 검색/부가정보서비스

검색 및 부가정보서비스에서 SHERPA/RoMEO와 SCPJ간에 차이점은 SHERPA/RoMEO의 검색항목이 SCPJ보다 상세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색옵션에서 검색된 결과 중 특정 기금 기관으로부터 오픈엑세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학술지나 출판사로의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브라우징, OpenAPI제공, RSS 피드, 통계정보 제공 등의 부가정보서비스는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검색/부가정보서비스 비교

구분	SHERPA/RoMEO	SCPJ	국내 적용 여부	
			SHERPA/RoMEO	SCPJ
검색항목	· 기본검색항목 : 학술지명, ISSN, 출판사명 · 상세검색항목 : 학술지명, ISSN, 출판사명외 출판사 RoMEO ID, RoMEO Color, RoMEO Updata data, Country · 검색옵션 : 검색된 결과 중 특정 기금 기관에 대해서 오픈엑세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학술지나 출판사로 필터링 가능	· 기본검색항목 : 학술지명, 학회명 · 상세검색항목 : 학술지명, 학회명외 주제분야, 아카이빙 정책유형(Color), 출판사 버전 사용가능 유무, 아카이빙 장소, 아카이빙 조건 · SHERPA/RoMEO 검색기능 제공	-	○
브라우징	· 학술지명, 출판사명	· 아카이빙 정책유형(SCPJ Color 유형)	-	○

OpenAPI 제공유무	· 제공	· 제공	-	○
RSS 피드 제공유무	· 제공	· 제공	-	○
기타 정보 (통계)	· 제공	· 제공	-	○

3. 소결

학술지 논문의 오픈액세스의 실천전략에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과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이 있다. 그런데 SHERPA/RoMEO와 SCPJ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저작권 귀속 주체인 학술지 출판사가 저자에게 허락하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정책정보는 주요한 수집정보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를 보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규정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가 전체의 5%정도로 매우 낮고 대신 학술지 논문에 무료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OA학술지와 HA학술지)가 전체의 56%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내시스템 모형의 경우에는 SHERPA/RoMEO와 SCPJ 운영사례에서 주로 다루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학술지 논문의 원문서비스 방식에 대한 정책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V.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안

1. 목적과 목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 국내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을 명문화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정보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저자, 이용자, 도서관, 유통기관 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런 목적 하에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고논문이 어떤 수준에서 오픈액세스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문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정책정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국내 저자와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SHERPA/RoMEO에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을 등록함으로써 해외 저자와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해당 학술지를 등재함으로써 확고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대외적 인정을 받도록 한다.

2. 운영 프로세스(안)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의 운영 프로세스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귀속 규정 등이 미흡하다는 점과 학술지 편집위원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안내시스템 모형에서는 저작권 전문가에 의한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의 분석·처리와 학술지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서비스 단계를 포함하여 제안한다.

가. 학술지 편집위원의 입력 단계

(1) 기본 방향성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이나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술지 편집위원 중에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 없이 학술지 논문이 발행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술지 편집위원에 의한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입력단계에서는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지 편집위원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 ② 학술지 편집위원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 ③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할 항목은 가능한 최소화한다.

(2) 입력할 사항들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할 사항들은 크게 일반사항과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사항

여기에는 크게 출판사명(국문/영문), 출판사 홈페이지 URL, 입력자이름(국문/영문), 입력자 직책, 입력자 이메일을 포함한다. 향후 SHERPA/RoMEO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영문명과 URL, 그리고 입력자 영문명과 입력자의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하도록 한다.

②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사항

여기서는 1)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제시된 저작권 귀속 주체, 2) 학술지 논문의 원문서비스 채널, 3) 학술지 논문에 CCL 부착 유무의 3가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한다.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보여주는 입력화면 구성안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1.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르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학술지 투고 규정 사례 : 제 19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000000학회”에 있다.”

1) 저자
 2) 학술지 출판사(예시 : 학회, 연구소 등)
 3) 학술지 투고 규정에 해당 사항이 미기재되어 있음
 4) 기타(예시 :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음)

(증빙파일 탑재)
 ① 투고 규정이 기술된 웹사이트의 해당 URL 정보 ② 저작권 양도 동의서 샘플(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탑재)

2. 학술지 논문은 어디를 통해서 원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복수응답)

1) 유료DB (세부선택사항 : DBpia, KISS, e-article, 교보문고스콜라, 뉴논문. 기타() / 국외())
 2) 무료DB (세부선택사항 : 과학기술학회마을, KCI, 기타() / 국외())
 3) 홈페이지
 4) 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사유 :)

3. 학술지 논문에 Creative Commons License(CCL)를 부착하여 자유이용허락표시를 하고 있는가?

1) 아니오.
 2) 그렇다. 이 경우에 CCL 6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는가?
 ①CC BY ② CC BY-ND ③ CC BY-NC ④CC BY-NC ⑤CC BY-NC-ND ⑥CC BY-NC-SA

<그림 3> 학술지 편집위원의 입력화면 구성안

첫째, 학술지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규정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홍재현(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학회가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술지 투고규정에는 예시된 바와 같이 ‘제 19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저작권은 “00000학회”에 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술된 증빙파일을 탑재하도록 한다.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학술지 홈페이지의 URL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저작권 양도 동의서가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탑재하도록 한다. 증빙파일은 추후 저작권 전문가가 해당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기초 정보로 활용한다.

둘째, 국내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학술지 출판사가 암묵적으로 저작권 귀속주체라는 전제하에 학술지 논문을 무료DB와 유료DB를 통해서 유통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체계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함께 학술지 논문의 유료와 무료 유통방식도 중요한 정보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학술지 논문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 유료DB와 무료DB(학회 홈페이지)들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도 오픈엑세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약학 분야에서 CCL을 부착한 학술지 논문들이 KoreadMed Synapse(<http://synapse.koreamed.org>)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CCL을 부착한 학술지 논문이 OAK Central(<http://central.oak.go.kr>)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학술지 논문에 CCL 부착유무 및 CCL 유형정보도 중요한 정보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 저작권 전문가에 의한 분석 및 처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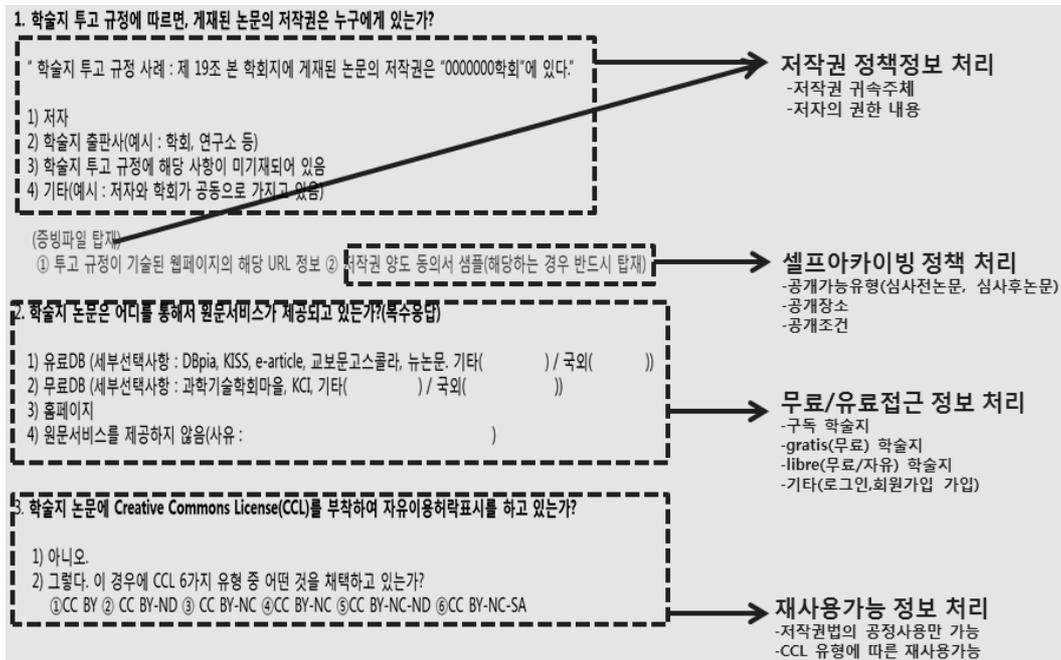
(1) 기본 방향성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한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는 저작권 전문가에 의한 분석 및 처리과정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에 대한 분석·처리는 저작권 전문가가 담당한다.
- ②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한 정책정보를 토대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분석·처리한다.
- ③ 저작권 전문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분석 및 처리 사항

저작권 전문가는 <그림 4>와 같이 학술지 편집위원이 입력한 정책정보를 토대로 1) 저작권 정책정보, 2) 셀프 아카이빙 정책정보, 3) 무료/유료접근 정보, 4) 재사용가능 정보에 대해 분석하여 처리한다.



<그림 4> 저작권 전문자에 의한 분석 및 처리 사항

첫째,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와 이에 대한 증빙파일을 토대로 ‘저작권 정책정보 (저작권 귀속주체, 저자의 권한 내용)’를 처리한다. 둘째, 증빙파일을 토대로 특히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토대로 저자가 저작권 양도 이후 가지는 권리 내용 중에서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처리한다.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공개가능유형이 무엇인지와 공개장소, 그리고 공개조건 등을 분석하여 처리한다. 셋째, 학술지 논문의 원문서비스 방식을 토대로 무료와 유료접근 정책정보를 처리한다. 이 때 유료DB를 통해서만 유통될 경우에는 구독 학술지로 처리한다. 그리고 무료DB만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와 무료DB 및 유료DB에서 동시에 유통되는 경우는 모두 무료 학술지(gratis 학술지)로 처리한다. 그 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타 학술지로 처리한다. 넷째, 학술지 논문 단위에 CCL이 부착되어 자유이용허락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료/자유 학술지(libre 학술지)로 처리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CL의 6가지 이용조건에 따라서 재사용가능정도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 점검 및 컨설팅 단계

(1) 기본 방향성

저작권 전문가에 의해서 해당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에 대한 분석과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분석된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정보

를 통보해 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술지 편집위원이 현재 자신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정보에 대한 점검표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제시하는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정보에 대한 점검표는 <그림 5>와 같이 구성한다. 점검표는 크게 1) 무료접근정책, 2) 재사용정책, 3) 저작권 정책, 4) 셀프 아카이빙 정책의 4가지로 구성된다. 학술지 편집위원은 자신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해서 4가지 구성요소별로 정책 수준을 확인해 보고 4가지 구성요소마다 오픈엑세스 정도를 조정하기 위한 컨설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ccess	무료접근정책	재사용정책	저작권 정책	셀프 아카이빙 정책
OPEN ACCESS	출판즉시	CC BY	저자가 저작권을 온전히 보유	저자는 심사전,심사후,출판논문을 어떤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엠바고 6개월이하		CC BY SA CC BY-NC CC BY-NC-SA	저자가 몇 가지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저작권 보유	저자는 심사후 논문을 어떤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엠바고 6개월이상		CC BY-ND CC BY-NC-ND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허락	저자는 심사후 논문을 특정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		-----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허락	저자는 심사전 논문을 특정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도 아카이빙 가능
CLOSED ACCESS	구독 회원가입 등	공정이용과 저작권 제한 규정내에서 재사용 가능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	저자는 어떤 논문버전도 어떤 리포지터리나 웹사이트에 아카이빙 하지 못함

<그림 5>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정보에 대한 점검표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정보 점검표에 포함된 4가지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료접근정책은 해당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나타낸다. 국내의 학술지의 경우 엠바고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출판즉시 무료DB나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유료DB를 통해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와 특별히 회원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사용정책은 CCL 부착을 통해 자유로운 이용허락의 조건을 나타낸다. CCL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CC BY에서 가장 덜 개방적인 CC BY-NC-ND까지 자유로운 이용허락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외 CCL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이용과 저작권 제한 규정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정책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제한 조건의 수준들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서 홍재현(2008)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의 경우 저작권 귀속주체와 제한 조건에 대해서 여러 조건 수준들이 존재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학술지 출판사들이 저자에게 허용하는 공개버전, 공개장소, 공개조건의 수준을 나타낸다.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규정에 저자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SHERPA/RoMEO와 SCPJ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 수준을 준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정보의 검색서비스 단계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분석·처리된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정보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 유형별 요구정보를 정리하고 검색결과 제공화면을 제시한다.

(1) 기본 방향성

① 오픈액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액세스 정책정보들을 가능한 모두 제시하도록 한다.

② 검색결과 제공화면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식’으로 구성한다.

예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자는 (저자)입니다.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정책은 해당 발행기관의 (투고 규정 URL)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유형별 요구정보

저자(연구자), 이용자(개인), 도서관(사서), 유통기관(유료/무료)의 4가지 이용자 유형별 요구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저자(연구자)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저자가 소유하는가? 아니면 학술지 출판사에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가?

-학술지 논문 버전 중 저자가 공개 가능한 논문 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개가능한 장소(리포지터리 등)와 공개시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학술지 논문은 누구나 무료 접근이 가능한가? 무료접근에 제한사항은 무엇인가?

-학술지 논문에는 어떤 CCL 유형이 부착되는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저자의 학술지 논문이 재사용되는가?

② 이용자(개인)의 경우

-학술지 논문은 무료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가?

-학술지 논문은 어떤 CCL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이용자의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해당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예) 해당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가 작성중인 다른 학술지 논문에 자유롭게 수정/변경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가?

③ 도서관(사서)의 경우

-기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한 학술지 논문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 저자인가? 학술지 출판사인가?

-기관 소속 연구자가 투고한 학술지 논문을 기관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여 무료 공개하고자 한다. 공개 논문 버전, 공개가능장소, 공개시 조건은 무엇인가?

-도서관 이용자에게 학술지 논문에 무료접근을 시킬 수 있는가?

-학술지 논문은 어떤 CCL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서관 입장에서 자유로운 재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이용자가 요청하는 다수의 학술지 논문들의 서론 부분들만 취합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

④ 유통기관(유료/무료)의 경우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 중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 즉 학술지 원문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계약/협약을 맺어야 하는가?

-학술지 논문과 관련하여 이미 실행되고 있는 오픈엑세스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학술지 논문이 어떤 논문 버전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용조건으로 공개되어 있는가?

예) 학술지 논문은 영리적 목적으로 재사용가능한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3) 검색결과에서 제공될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식’으로 구성한다는 기본 방향성과 이용자 유형별 요구정보를 토대로 검색결과에서 제시될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주체에 관한 정보
 -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재산권자는 (저자, 학술지 출판사, 기타)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귀속규정 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학술지 논문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에 관한 정보
 - 학술지 출판사는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저자는 (심사전 논문, 심사후 논문, 출판용 논문)을 아카이빙 할 수 있습니다.
 - 저자는 (공개 장소)에 아카이빙할 수 있습니다.
 - 저자는 (공개 장소)에 아카이빙할 경우, 반드시 다음의 (공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학술지 논문의 무료 접근 정보
 -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무료/유료/기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학술지 논문이 유통되는 채널은 (무료DB, 유료DB, 기타)가 있습니다.
- ④ 학술지 논문의 CC 라이선스 유형 정보
 - 학술지 논문에는 CC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CC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한에서 학술지 논문을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합니다.

V. 결론 및 제언

국내 학술지 출판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학술지 편집위원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규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지 편집위원이 스스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현재 자신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규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오픈엑세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필요하다면 저작권 귀속규정과 오픈엑세스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식채널을 통해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을 통해 국내 학술지 출판사가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명문화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명확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정보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고논문이 어떤 수준에서 오픈엑세스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문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 안내시스템 모형과 관련해서 4가지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간단한 사항만을 입력하도록 한다. 둘째, 학술지 편집인이 입력한 학술지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에 대해 저작권 전문가가 정책 정보를 분석·처리하도록 한다. 셋째, 입력된 학술지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에 대해 4가지 구성요소의 점검표를 제공하여 주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한다. 넷째, 오픈엑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검색결과 화면을 구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내시스템 모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학술지 출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학술지 평가기관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기관에게 본 안내시스템 모형의 목적과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두 기관으로부터의 요구사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학회들이 본 안내시스템 모형의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학술지 논문의 명확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에 기반한 학술지 논문의 출판 및 유통 생태계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규환. 2013a. 국내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리 방안 제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 137-154.
- 김규환. 2013b. 국내 학술지 논문의 self-archiving을 위한 저작권 및 아카이빙 정책 관리시스템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5-112.
- 김규환. 2014b. 국내 학회의 오픈엑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31(3): 111-131.
- 윤희운, 이재민. 2006. 국내 학회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과 개선방안. 『정보관리연구』, 37(1): 17-37.
- 정경희. 2011.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 학회지』, 22(3): 373-391.
-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1-463.
-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2. Read 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http://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cited 2016. 11. 15].
- Peter Suber. 2008. Open access overview: Focusing on open access to peer-reviewed research articles and their preprints. <<http://legacy.earlham.edu/~peters/fos/overview.htm>> [cited 2016. 11. 15].
- Peter Suber (2008). Gratis and Libre Open Access. SPARC Open Access Newsletter. <<http://www.sparc.arl.org/resource/gratis-and-libre-open-access.>> [cited 2016. 11. 1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yuhwan Kim. 2013a. "A Proposal for Copyright and License Management for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ccasional Papers Series*, 31: 137-154.
- Gyuhwan Kim. 2013b. "A Case Study of Copyright and Self Archiving Policy Management System for Self Archiving of Journal Articles." *2013 Proceeding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95-112.
- Gyuhwan Kim. 2014b. "A Proposal for the Acceptance and Process of Open Access in Korean Socie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111-131.
- Hee-Yoon Yoon, Jae-Min Lee. 2006. "Copyright Possession and Improving Plan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7(1): 17-37.
- Hong, J. H. 2008.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31-463.
- Kyoung-Hee Jung. 2011. "Characteristics of Open Access Journals in Korea : Focused on KCI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373-391.